

日 국채 금리 4%대 급등… 고개 든 엔캐리 청산 공포

저리 엔화 빌려 타국 자산에 투자 국채금리 변동성 커지며 시장 긴장 “급격한 청산 가능성 적어” 의견도

최근 글로벌 금융가에선 일본의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 되돌림 현상이 가속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 악화 우려에 지난 20일 일본의 4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246%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연 4%를 넘어섰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2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려 다른 국가의 자산, 특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시장 금리가 오르면 미국 주식 등에 투자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본으로 복귀하면서 증시 폭락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출렁인다. 닛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엔 캐리 자금 규모를 20조달러(약 2경6700조원)로 추정한다.

◆**日 국채금리 상승, 긴장하는 금융시장**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시장의 높은 금리 상승 민감도에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엔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현상이 가속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자리 잡은 ‘엔화 빚투’가 또한번 청산 위기를 맞을 거란 우려 때문이다.

국채 금리 상승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다. 골드만삭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조기총선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가 2년간 소비세(부가가치세)를 0%로 낮추는 방안 검토 중이다”면서 “이는 연간 약 5조엔(국채발행의 11%)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클 것이다. 특별한 조달 계획 없이 발표되면서 시장 불안도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총선(2월8일)

과 함께 식료품 소비세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이와증권은 “일본 정부가 그간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각종 부양책을 발표한 후 소비세를 감면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채권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채 가격이 내려가자 뱅가드는 올해 일본 장기물 국채 매입을 중단했다. T D증권은 “일본 정부는 그간 확장적 재정에 따른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위험을 과소평가 했으나, 시장에서는 동 위험을 중립금리 상승 및 기간 프리미엄

확대를 통해 반영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일본 국채 수요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본 국채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지만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이르면 4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골드만삭스는 “일본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했으나, 30년물은 4.5~5.0%로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자산군 청산 가능성 vs 급격한 청산 국면 아냐**

세계 금융시장은 국채금리 상승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연될까 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금리를 연 0.25%로 ‘깎짝’ 인상했는데, 당시 162엔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140엔대 초반으로 떨어졌다(엔화 가치 상승). 이에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다. 같은해 8월 5일 코스피는 8% 넘게 하락,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블랙 먼데이’로 불리기도 했다.

씨티는 “일본 국채금리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다른 자산군 특히 미국채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주식·채권·원자재 등 여러 자산에

동일한 변동성으로 자산을 배분 하는 ‘리스크 패리티(Risk Parity) 펀드들이 미국채만 최대 1300억달러어치 매도할 수 있다”고 했다. 씨티 글로벌 마켓의 아시아 트레이딩 전략헤드인 모하메드 아파바이는 “2024년 7월 이후 한국 국채를 보유한 외국인인 10%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손절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이 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일본은행이 다시 국채를 매입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23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뒤 엔화는 달러당 159엔대까지 떨어졌다. 일본 주요 투자은행(IB)은 옵션시장에서 달러·엔 165엔 도달에 베팅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언와인드가 본격화될 경우 파급 경로는 통상 ‘엔화 강세 → 금리 및 크레딧 시장 변동성 확대 → 주식 및 대체자산 조정’의 순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과거와 같은 전면적·급격한 청산보다는 엔캐리 언와인드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특사경 확대 놓고 금융당국 갈등 수면 위

금감원, 수사심의위 설치 등 제시 금융위 “자체 통제장치 문제 있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통해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공권력 통제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까지 수사?…특사경 확대 놓고 당국 간 파열음**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금융위는 즉각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금감원 제안 상당수에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조사·민생범죄 대응뿐 아니라 검사·회계감리 영역에서도

특사경 도입의 실익이 크다고 보고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 및 회계감리의 목적부터 따져 보고 있지만, 수사로 전환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감리를 받는 일반 민간기업 전체가 금감원의 잠재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곧바로 형사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조직 ‘몸집 불리기’나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업무보고 당시 지시에 따라 검토 방안을 마련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금융당국 업무보고에서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추가돼야 하는지, 인지 수사권이 필요한지 등을 정리해 총리실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검토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해석은 다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의 일반적인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한 발언을 사전인수적으로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민간 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동결, 디지털 포렌식 등 전방위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할지를 두고 법리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 직접 채용, 정치적 중립 의무, 단체행동권 제한, 징계 제도 등을 통해 직무 공정성이 담보되지만, 금감원과 같은 공무 수탁 사인은 이러한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공권력 남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체 ‘통제장치’ 윤곽…동수 수사심의위·증선위 사후보고**

금감원은 특사경 범위 확대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추진하는데 공권력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마련 중이다.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와는 별개로 금감원 인지수사 착수를 결정할 심의위를 금감원 산하에 둔다. 위원장은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맡되 중립성을 위해 금융위 심의위 위원을 포함해 양 기관의 인원 비율이 최소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법률자문관 등 외부위원도 포함한다. 인지수사 상황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대면 보고한다. 다만 수사 착수 시 보고를 거치면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조사국의 기획조사 사건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 등을 세칙에 명시해 인지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영장주의 회피 우려를 잠재우고자 수사 전환 이전까지 조사·수사부서 간 정보 교류는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강화는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인지수사권 부여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한다. 특히 금감원이 자체 심의위를 내부에 두고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 자체가 권한 통제·견제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ETF 명칭 직관적으로 바꾼다

펀더멘털 빼고 플러스 추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그룹주에 투자하는 ETF 3종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로,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삼성그룹 ETF’로, ‘TIGER LG그룹+펀더멘털 ETF’는 ‘TIGER LG그룹플러스 ETF’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은 해당 상품이 각 그룹의 핵심 계열사에 집중 투자한다는 의미를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는 국내 유일하게 현대차그룹 주식에 투자하는 ETF로, 피지컬 AI뿐 아니라 조선·방산·원자력·전력기기 등으로 확장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상품명 변경 안내	
TIGER 현대차그룹+펀더멘털 ETF	HYUNDAI
➡ TIGER 현대차그룹플러스 ETF	138540
TIGER LG그룹+펀더멘털 ETF	LG
➡ TIGER LG그룹플러스 ETF	138530
TIGER 삼성그룹펀더멘털 ETF	SAMSUNG
➡ TIGER 삼성그룹 ETF	138520

되는 그룹 계열사의 핵심 성장 축을 함께 담고 있다. 23일 기준 순자산은 3796억원으로 연초 이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고, 개인 투자자 순매수 금액은 136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익률은 39.94%로 코스피200 수익률(19.20%)을 상회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퇴직연금 수익률 DB·DC 1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KB증권이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수익률에서 우수한 운용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모두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대상 주요 증권사 가운데, KB증권은 원리금비보장형 1년 수익률 부문에서 DB(8.97%)·DC형(23.32%) 1위를 기록했으며, IRP(개인형퇴직연금) 부

문(20.81%)에서도 2위에 올랐다.

또한, KB증권은 IRP 자산 성장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KB증권의 IRP 적립금은 2022년 7698억원에서 2025년 2조9094억원으로 확대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해당 성장률은 증권업권 내 최고 수준이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자산배분 전략과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